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1. 1

국민권익위원회

I.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판단기준
정책설계	1. 성과지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도
	2. 과제수단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단의 적정성 ○ 과제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집행	1. 추진계획 준수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2.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상황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대처 및 장애요인 개선·극복 노력
	3.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부처/관련부서/외부기관 등과의 협업 성과
정책성과 및 효과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 목표치 달성 정도
	2.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정책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
	3.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 ○ 홍보의 효과성
	4. 정책 환류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점검결과 개선·보완 및 적극적 관리 노력

II. 평가결과

(1) 총 평

□ '20년도 총 14개 관리과제(24개 부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1등급 '매우우수' 1개(7.1%), 2등급 '우수' 2개(14.3%), 3등급 '다소 우수' 2개(14.3%), 4등급 '보통' 4개(28.6%), 5등급 '다소 미흡' 2개(14.3%), 6등급 '미흡' 2개(14.3%), 7등급 '매우 미흡' 1개(7.1%)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II-2-③. 민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I-2-②.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II-2-①.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II-1-③.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심판', 'I-1-②.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 'I-2-④.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 등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지난 4년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범국가적인 부패·불공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전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별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상승해 2020년에는 61점으로 세계 33위를 기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도 4년 연속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남
- 또한, 국민 중심·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정책을 추진하여, 2만 건 이상의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사건을 인용 해결하였으며, 범정부 정책 소통·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과 소통하여 218건의 공정·포용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

- 총 14개 관리과제의 3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8.6% 수준임
 - 2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6개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특히,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이해관계자 대면소통이 급감하면서 ‘고충민원 인용률’,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등이 미달성되었고,
 - 행정심판 처리절차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은 일반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하여 ‘행정심판 평균재결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Ⅱ-2-③. 민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Ⅰ-2-②.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Ⅱ-2-①.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Ⅱ-2-③. 민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지원’의 경우, 민원 데이터에 기반하여 민원유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협업·개방을 통해 민원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함
 - * 코로나19, 전동킥보드 등 국민건강·안전, 장애인 일자리 등 포용국가·불공정 등과 관련된 민원 이슈를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개선 지원
 - * 행정기관만 공유했던 민원정보를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개편·운영('20.2.)

- ‘Ⅰ-2-②.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의 경우, 관계부처 간 원활한 조정과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공정 법령을 대폭 개선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처벌 추진
 - * 교육·채용·보조금·탈세근절 등 성과지표 관련 제·개정 완료 법률 : 6건
 -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위 적발 건수 지속 감소 : '19년 적발건수(83건)는 '18년 대비 54.4%, '17년 대비 75.4% 감소

- ‘Ⅱ-2-①.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민원으로부터 국민불편, 정책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실현
 - * 주요 개선권고 : 교복 학교 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7.20),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10.26.),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 물품 명확화 등 마련(6.8), 코로나19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개선(6.8) 등

(3) 개선·보완 사항

- ‘Ⅱ-1-③.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심판’, ‘Ⅰ-1-②.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 ‘Ⅰ-2-④.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 등 3개 과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Ⅱ-1-③.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방식 개선, 온라인 행정심판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민 기대 수준에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분석됨. 향후 조사관 역량 강화, 장기미결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이 필요
 - * 난이도 높은 일반사건 비중이 증가하여 평균재결기간이 '17년 77.2일 → '18년 82.6일 → '19년 68.8일 → '20년 87일로 증가

○ ‘I-1-②.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의 경우,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대책 마련 및 협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규범 확립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부정청탁 행위 규율 강화 등 현 추진 정책을 더욱 적극 추진할 필요

*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명시하는 것 추진

○ ‘I-2-④.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의 경우, 신규 제정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교육·법령 해석 체계 구축·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기에는 일렀던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육·점검 노력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교육 강화, 법령 해석자문단 적극 운영 등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I-1-①. 국민과 함께 반부패·공정 개혁에 전력	다소 우수
I-1-②.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	미흡
I-1-③. 청렴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확산	다소 미흡
I-1-④. 반부패 개혁 성과를 공공·민간뿐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확산	보통
I-2-①. 제도 속 내재된 불공정 및 고질적 부패관행 개선	보통
I-2-②.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우수
I-2-③.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	다소 우수
I-2-④.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라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	미흡
II-1-①. 고충민원 적극처리로 국민고충·애로 해소	다소 미흡
II-1-②.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적 민원 상담	보통
II-1-③.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심판	매우 미흡
II-2-①.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우수
II-2-②. 정책의 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참여 확대	보통
II-2-③. 민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매우 우수